



제15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국내외 지식재산 최근 동향

하홍준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주요 목차

I. 지식재산의 개념 및 의의

II.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III. 지재연 선정 2019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1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유형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등을 총칭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
- 산업재산권은 출원, 심사, 등록의 절차를 거쳐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등은 창작성만 인정되면 등록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호

산업재산권	특 허 권	기술적 창작인 원천, 핵심기술(대발명)	→ 등록일부터 출원일로 소급하여 20년
	실용신안	수명주기가 짧고 실용적 주변, 개량기술 (소발명)	→ 등록일부터 출원일로 소급하여 10년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의 결합 (심미감)	→ 등록일부터 출원일로 소급하여 20년
	상 표 권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호, 문자 등 결합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저작권	협의저작권	문학, 학술, 예술 분야의 창작물 등	→ 저작자 생존기간, 사후 70년
	인접저작권	실연가,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	→ 권리발생 후 70년 (방송의 경우 50년)
*신지식재산권	협의/광의	협의: 인공지능, 생명공학, 영업비밀, 소프트웨어 광의: 캐릭터, 퍼블리시티권, 지리적표시 등	

2 지식재산 제도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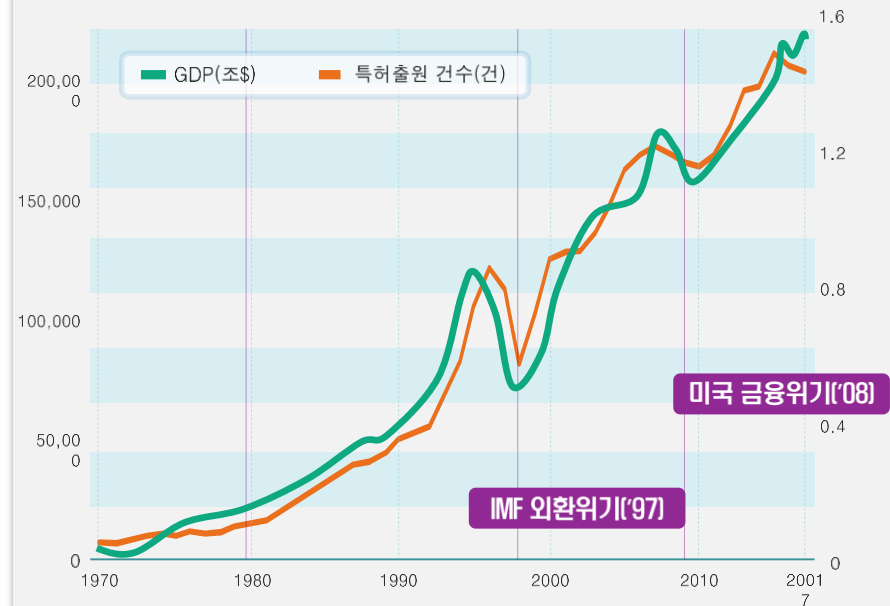


3 지식재산과 경제성장

- 특허성장이 경제성장을 유인 (Josheski & Koteski, 2011)
 - G7국가에서 특허건수 1%p 증가 시, 1인당 GDP 0.65% 증가
- 고품질 특허를 보유할수록 GDP 성장률이 더 높음 (Hasan & Tucci, 2010)
 - 58개 국가에서 특허의 양과 질이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강한 특허제도는 특허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빠른 성장을 유인 (HU & Png, 2013)
 - 특허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80년대보다 90년대에 더 강함
-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한 산업인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GDP비중, 고용비중 증가
 - (미국) '10년 34.8%, 18.5% → '14년 38.2%, 18.2%
 - (유럽) '08~'10년 38.6%, 26.0% → '11~'13년 42.0%, 27.8%

- 국내 특허출원 건수와 GDP도 뚜렷한 양의 상관 관계
- 우리경제는 R&D를 통한 특허 확보에 매진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와 경제성장



주요 목차

I. 지식재산의 개념 및 의의

II.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III. 지재연 선정 2019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1 산업기술, 영업비밀, 데이터 등의 강력한 보호

■ (미국) 최근 증가하고 있는 네트워크 범죄에 대응하고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

- 2018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사이버보안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을 발표 → 최근 악의적인 국가와 범죄자 등이 미국의 지식재산과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기반시설을 손상시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이후 15년 만에 미국을 위한 사이버보안 전략을 수립
- 2019년 11월 상무부(DOC)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이행 규정 제안
- 미국 국방부(DOD)는 2019년 8월 국방수권법에 따라 중국과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에 맞서 군사 기술을 확보하고 무기개발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지식재산 핵심그룹(IP Cadre)'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발표

■ (중국) 데이터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 자국 데이터 보안을 위해 2019년 5월 '데이터 보안관리 방법(초안)' 발표 → 인터넷 운영 기업이 '중요 데이터'를 발표·공유·거래 또는 국외에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보안 위험을 평가하고 감독관리 기관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함
- 2019년 4월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의 정의를 수정하고, 영업비밀의 침해간주 규정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의 증명책임전환 등의 규정을 새로 도입하여 중국 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

1 산업기술, 영업비밀, 데이터 등의 강력한 보호

- (일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8년 8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한정제공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 등의 행위를 신설, 한정제공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 등에 대한 민사적 구제조치를 신설, 기존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
- (유럽)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디지털 경제를 증진시키고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2018년 5월부터 시행
 -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사업장은 없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EU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은 동 법의 적용을 받아 법령 위반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도모

2 바이오 혁신

-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센터(GIPC)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상의 의약품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혁신가들이 미래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강조
 - 한편, 미국 FDA는 '바이오시밀러 액션플랜(BAP)' 발표 → 바이오시밀러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안 등 4가지 주요 전략과 11가지의 구체적 액션플랜을 제시
- (중국) 바이오 산업을 전략성 신흥산업으로 지정, 동시에 지식재산권 중점지원산업 목록에 포함시켜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
 - 2018년 4월 '복제약 공급 보장 및 사용 정책 개혁 완비에 관한 의견' 발표 → 복제약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사용 전 과정과 전 영역의 정책을 혁신, 복제약 공급 보장능력을 제고
- (일본) 글로벌 3위의 제약시장 규모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건강·의료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
 -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관(AMED) 설립, 재생의료 실용화 촉진 및 의약품 승인 가속화 등 지원체계를 정비
 - 특허청은 TPP에 따라 특허법 제67조 등을 개정 → 의약품 등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강화
- (유럽) 의약품의 추가적 보호증명(SPC) 제도 개정, 관련 산업의 보호를 강화
 - 의약품의 허가 등의 절차로 인하여 특허 받는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 최대 5년의 기간 내에서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제도
 - 2019년 4월 본회의에서 SPV 제도에 제조면제(manufacturing waiver)를 도입하는 SPV 규칙 개정안을 채택

3 보호무역 등의 조치

■ 미중 무역전쟁

- 2017년 Trump 행정부가 통상법(U.S. Trade Act)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조사에 착수, 2018년 3월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을 포함하여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수입품(1,102개)에 대해 관세를 부과,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조건이 TRIPs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 2018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90일간 조건부 무역전쟁의 휴전에 합의
- 2019년 6월 중국 정부는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해 국가적인 손실이 수반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백서를 발표
- 1단계 무역협상을 통해 2019년 12월 12일 기준으로 양국은 무역합의에 서명
- 향후 2단계 협상에서 중국의 산업 스파이행위와 기술이전 강요 문제 등 미중 무역마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민감 사안들이 다루어질 예정

■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

-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
-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3가지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을 통제,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 한국 정부는 대일(對日)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3 보호무역 등의 조치

■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 영국 정부는 2018년 2월 브렉시트에 관련한 합의문 초안을 통해 EU의 지식재산권을 영국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발표
-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2018년 3월 '지식재산과 브렉시트(IP and Brexit)'를 발표하여 영국 정부의 통합특허법원협정에 관한 의사를 확인
- 유럽 차원에서 유럽의회는 2019년 11월 유럽 사법재판소(CJEU)의 법리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유럽 통합특허법원 협정(UPCA)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인 "유럽연합 특허와 브렉시트(EU Patent and Brexit)"를 발간

4 국제협력 강화

-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의 협력체인 IP5는 매년 미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연례 청장회의를 개최
 - 2019년 6월 제12회 IP5 청장회의에서는 세계 5대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

4 국제협력 강화

■ USMCA 협정

- 기존의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지난 2018년 11월에 미국이 최종 서명하여 합의
- 영업비밀, 데이터 보호, 특허, 상표, 저작권 및 민·형사, 행정집행과 같은 주요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사항을 포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USMCA가 미국의 실질적 GDP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일 무역협정 및 디지털 무역협정

- 양국은 글로벌 디지털 선두 국가로서 기술혁신을 위해 모든 경제 분야에서 공급자를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고 기준을 세우는데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9년 9월 양측이 동 협정에 서명
- 동 협정은 지금까지 협상된 디지털 무역 장벽 중 가장 포괄적이고 수준이 높은 무역 협정으로서 USMCA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EU와 지식재산권 협력 등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 동 공동성명에는 공정경쟁, 시장개방, 다자주의 등에 관한 쌍방의 노력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
- 중국 상무부는 2019년 11월 유럽 집행위원회와 '중국·유럽 지리적표시 협정(中欧地理标志协定)'을 체결

주요 목차

I. 지식재산의 개념 및 의의

II.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III. 지재연 선정 2019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1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19.7.9)
 -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97~'17) 6천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97~'16) 65.7억원 대비 매우 적음
 - 특허권·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그러나, 3배 배상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 유인을 원천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업계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어, 스타트업 등 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의 실익이 없다. 최소 10배의 징벌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 공동성명, '19.10.29)

 - 고의 침해 여부 판단 기준, 배상금 산정 기준, 심리 방식, 입증 책임 등의 쟁점이 존재

2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

-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 조기 기술확보와 미래 시장 선도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대책 명	발표일	발표주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19.08.05.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	'19.08.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19.11.14.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IP-R&D 강화방안	'19.11.20.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 지식재산 기반의 R&D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확보 추진 예정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정부 R&D 과제에 R&D와 IP-R&D 전략의 패키지 지원 전면 확대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IP-R&D 전략 지원

3 지재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무역전쟁을 시작
- 지식재산권은 사권(私權)이므로 지식재산권 분쟁도 사인간 분쟁으로 취급됨이 원칙이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지식재산 제도에서 기인한 정부간 지식재산권 분쟁
 -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것을 해소하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중국 지식재산 제도와 집행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 중국은 등가대응이 원칙이지만 대규모 무역흑자('18년 기준 378조원)를 고려할 때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 미국에 대한 직접 타격(보복관세)과 함께 대미 의존도 완화(일대일로, 금융개방)도 모색

〈 미·중 무역분쟁 경과 〉

날 짜	내 용
2017.4.14.	미국 환율정책보고서 발표(관찰대상국에 중국 지정)
2017.4.20.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명령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련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2017.8.14.	트럼프 대통령 통상법 301조 조사 명령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지재권 침해 피해여부 조사)
2017.8.18.	對중국 301조 조사 개시
2017.10.10.	對중국 301조 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2017.10.17.	미국 환율정책보고서 발표(관찰대상국에 중국 지정)
2017.11.28.	미 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2018.3.1.	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 결정
2018.3.22.	301조 근거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관세 및 투자제한 내용 서명 발표(무역 대표부, 중국의 대미 지재권 침해 조사 결과 발표 및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 세 부과,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 ▶ 무역분쟁 시작
2018.4.3.	301조 관련 대중 제재 품목 리스트(1,333개) 공개
2018.4.5.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1,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제재조치 고려
2018.6.6.	ZTE에 대한 규제 해제 (10억 달러 벌금, 4억 달러 이행보증금 납부, 경영진 및 이사회 교체 등의 조건)
2018.6.15.	(1단계)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조치 (2단계) 160억 달러 규모의 관세조치 검토(최종적으로 1,102개 품목)
2018.6.18.	2천 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관세 검토
2018.8.1.	트럼프, 10%가 아닌 25% 추가관세 발표
2019.1.7.~5.1.	미중 무역협상(8차례)
2019.5.5.	트럼프,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3천25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부과 계획 발표
2019.5.10.	2천억 달러 규모의 5천700여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5% 관세 부과
2019.6.29.	미중, 추가관세 부담 잠정 중단에 합의
2019.12.13.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타결
2020.1.15.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2020.2.14.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발효

4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자립 및 일본 수출규제 타개 노력

- 특허청은 4억 3000여만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확보를 가속화 하는 방안 추진예정
 -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품목 연구개발(R&D)을 추진할 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전략을 적용해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지원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 선점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타 분야 특허기술 접목 등 R&D 전략 수립을 지원
 -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제공해 중소기업 등이 연구개발 시간, 비용 단축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
- 2019년 5대 산업분야에 시범적으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간 및 R&D 부처에 제공한 바 있음
 - 2020년부터는 AI기반 국가 특허 빅데이터를 센터를 구축해 27대 분야*에 대한 유망기술 발굴, 산업별 트렌드 및 위기 조짐 파악 결과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할 예정

* AI 빅데이터·VR 등 17대 신산업 분야 및 가전·석유화학 등 10대 주력산업 분야

5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 면책 논의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등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엄격한 보호경향으로 인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
 - 과거에는 활용되지 않았던 비정형 데이터*는 저작권법상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할 수도 있음
- *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히 개개인의 구매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셜네트워크 상의 기록들,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들, 사이트 방문자의 행동 패턴 등 다수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수반
-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언택트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폭넓은 소비자 니즈 데이터 보유 및 활용이 관건
 - 최근,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정보 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 고객 니즈 파악을 위한 핵심 정보인 '개인데이터'(원본 데이터) 활용에는 한계가 존재
 -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이미 지난 2018년부터 개인정보의 전송과 관련한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관련 국내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

6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상표법 개정 (시행)

- 2013년에도 상표법을 개정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법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6배 상향하는 등 상표권 침해의 손해배상 수준을 한차례 강화
- 2019년 11월 1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도 다시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 특허법 개정(제4차 개정안 심의 중)

-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
- 법적 손해배상액의 산정범위를 현행법의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1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

7 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 확산

- 혁신적 기술과 이로 인한 산업 간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예측되는 4차 산업혁명에 바이오 산업분야에서도 변화를 가속화
 - * (예시) IT와 BT가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합성생물학, 초정밀 의료용 로봇, 바이오 마커, AI에 의한 진단, 3D 프린팅을 이용한 재생의료, 유전자 가위 등 혁신기술이 부상
 -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적 바이오 신기술 선점으로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이 필수
 - 바이오 분야는 생명윤리의 문제, 특허대상 적격성 문제, 민감정보인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 등 지재권 제도 관련 특수성 존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바이오 IP 특별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 유망기술 분야 지식재산 이슈를 발굴하고 바이오 분야 지식재산 정책 방향 논의 진행

8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2,200억원 규모의 특허펀드 조성

- 특허청은 ‘제2의 벤처 붐’ 조성의 일환으로 올해 2,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 펀드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1,100억원(모태펀드 6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같은 규모의 자금을 매칭
 - 한국성장금융과 공동으로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해 펀드 규모를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집중 지원
- 펀드는 특허사업화(1,580억원), IP창출·보호(500억원), IP기반 스타트업 육성(120억원)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

분야	내용
특허사업화	우수 특허 보유기업과 IP수익화 프로젝트에 투자,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와 대학·공공연 우수특허의 해외 수익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집중 공급
IP창출, 보호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의 일부(투자금의 5% 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를 특허 출원·매입·분쟁대응·보호 컨설팅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IP역량 강화에 기여
IP기반 스타트업 육성	IP기반 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지원하고, IP엑셀러레이터*가 보육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후속 투자

9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 직무발명제도란 기업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하여 해당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발명진흥법 제10조)
 -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게는 사용한 금액의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직원에게는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음
 -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 등에 대한 보상금
 - 정부는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범위를 확대('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추가
- ※ 기존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10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건 돌파

- ‘19년 산업재산권 출원이 ’18년(480,245 건)보다 6.3% 증가한 510,736건으로 집계
 - 이는 1946년에 대한민국 첫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에 달성한 것으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
 - * ① 일본 1972년(87년 소요), ② 미국 1998년(208년 소요), ③ 중국 2002년(17년 소요)
- 권리별로 살펴보면, 상표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

〈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건수 (단위: 건, %) 〉

권리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상치)	(증감률)
특허	210,292	213,694	208,830	204,775	209,992	218,793	4.2
실용신안	9,194	8,711	7,767	6,809	6,232	5,405	△13.3
디자인	64,360	67,954	65,659	63,453	63,680	65,315	2.6
상표	160,663	185,443	181,606	182,918	200,341	221,223	10.4
합계	444,499	475,802	463,862	457,955	480,245	510,736	6.3

End of Document
감사합니다